

데스크 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제2사회부장

정치판과 주식시장의 공통점이 있다. 인기투표의 생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인기를 검증받지만 대통령선거 후보처럼 유력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수시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선 후보군을 선정한 후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 내고 있는 것이 정치판이 인기투표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대선후보 행보 따라 주가 출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200여 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야 상승하는 법.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주식시장을 미인대회에 비유했다. 미인을 선발할 때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다수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주식시장과 만나면 테마주가 형성된다. 본

정치인과 테마주

격적인 대선 시즌을 앞둔 요즘엔 더욱 정치 테마주가 관심을 받는다. 사실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는 지난해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다. 여론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빅3'가 형성되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후보자와 관련자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종목은 열 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 관련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의 1위이던 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데다 올해 들어 3위까지 추락하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 관련주는 4월 중순 정 후보가 국무총리를 사퇴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두 배 가량 상승했지만 지금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내려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관련주는 약발이 하루에 그쳤다. 지난 21일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장중 10% 이상 올랐지만 결국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여론에선 이재명 관련주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후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론에선 단연 윤석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윤 후보 관련주는 지난해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자 한 달 만에 네 배 가까이 급등했다.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피혁회사지만 회사 대표가 윤 후보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마주로 묶이면서 시장의 조명을 받았다. 최근 'X파일 논란'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유지한 탓에 관련주들은 크게 하

락하지 않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단번에 5위로 치고 나오자 관련주들이 5거래일 만에 70%가량 급등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관련주는 이준석 당 대표 턱을 토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청년 돌풍 속에 당선되자 그와 친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잠들어 있던 관련주가 꿈틀대고 있다.

우량주 고르는 안목 가져야

정치 테마주의 전형을 보여 주는 종목은 '안랩'이다. 안랩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업한 회사로 현재 회사 직함은 없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후보와 밀접한 종목이다. 그런 만큼 안랩의 주가는 안 후보의 정치 행보에 따라 움직여 왔는데 지금까지 세번 크게 출렁였다. 안 후보가 2011년 서울시 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2012년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 무렵이다. 안랩은 안 후보의 행보에 따라 주당 16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결국 제자리인 5-7만 원으로 복귀했다. 우량주인 안랩이 이탈진대 후보와 직접 관련도 없는 부실주가 특정 후보의 테마주로 묶인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가장 위험한 테마주로 꼽힌다.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했다가 거품이 꺼지면 '깡통' 차기 십상이다. 정치 테마주를 보면서 유권자들이 대선에서도 우량주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은펜칼럼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감성'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성공과 행복은 IQ(지능지수)보다 EQ(감성지능)가 좌우한다' '감성을 자극하라' '감정을 파고드는 감성 마케팅' 등의 문장이 넘쳐 난다. 감성을 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일이라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당연히 느끼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감성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긍정적, 심미적으로 잘 처리한다. 감성 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적응과 수업 적응의 향상성도 높다. 감성 능력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어른의 세계에서도 감성을 중요하다.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은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는 한 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달랐다. 이들은 모두 대단히 높은 감성 지능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현대 뇌 과학 역시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감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특히 적응 능력, 충동 억제,

감성이 실력입니다

대처 능력은 감성 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감성은 창의성 등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때문에 감성 지능과 감성 역량은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사회,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모든 배움은 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감성을 키우는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문학·음악·미술 과목이 있다. 그런데 이런 교과목은 이성 개발 즉 인지 능력 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도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예술에 기술을 집착하였던 작가 백남준은 이미 1960년대에 기술의 빠른 유입과 변화로 삶의 불안과 고통을 받을 사회에 대해 예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 안으로서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예술의 역할은 "미래를 상상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인지적·감성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장 정규 교과과정에서 예술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건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비교과 영역에서 감성을 증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필자는 광주교육에서 10여 년 전 폐지된 '1학생 1악기제'의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원하는 학생들에게 악기 하나씩을 다루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자는 것이다. 학교에 음악감상실, 합창단, 관현악단이 만들어지고, 수시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학교를 상상해 본다.

미술 교육은 학교 안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 여행 때 미술관, 박물관을 다니면서 흔하게 접하는 풍경 중 하나는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과 사진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필자는 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을 제2의 교실로 활용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어린이 시설인 문화전당이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성의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을 찾은, 교실 밖 체험 학습을 강화하면 좋겠다. 물론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체험 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는 수십 년 전에 폐교됐다.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는 지금도 초등학교 꽃밭에 심어졌던 장미, 개나리, 국화, 앵무나무 등의 모습이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다.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학교 꽃밭은 정서 함양과 미적 감성을 키우는 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인성 교육과 실력은 별개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의 감성과 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곧 인성 교육이다. 실력이라는 개념도 유연하게 해석하자. 국·영·수 등 일반 교과를 잘 하는 것,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 리더십이 좋은 것, 사람을 잘 사귀는 것 등 모두가 실력이다. 당연히 감성 능력 또한 소중한 실력이다.

기고



이중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환합·혼술·고독사·우울증·자살률·치매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고령사회' '노인' '부모님' 등이 아닐까.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10년 전에 비해 5%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이 21.1%에 달한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처한 현실이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들켜버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라 부모님을 찾아보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 가정도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걱정이 먼저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매일 25일이면 꼬박꼬박 안부를 묻는 효자가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어르신 중에는 25일만 기다렸다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다. 어떤 어르

기초연금, 어르신의 일상을 지배하다

신에게는 아들 손주 며느리가 찾아 온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예전의 우리 사회 전통 가족문화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함께 봉양하는 걸 당연시 여겨 왔다.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끼인 세대가 된 게 현실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연금을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자식들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생활비를 국가에서 잊지 않고 지급해 주니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빈번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꿈 같은 돈일 수 있다. 해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급자들에게 향후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니 대부분이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1.0%로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받는 금액도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전체 수급자에게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곳은 식비가 78.9%로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에 가스비나 수도세,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기초연금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으로 확인 후 안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꿀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꿀이라고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꿀이 어찌 달지 않을까 마는 최상품은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닐까.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이다. 암울했던 코로나19 상황도 올해면 어느 정도 끝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그리워하던 부모·형제·친지 얼굴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이 다시 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왔고 금방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국가에서는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드리며 지난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社說

‘호남 구애’ 나선 민주당 지역 현안 해결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 및 전남도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 가자 위기를 느낀 민주당도 전통적 지지 기반을 사수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올해 첫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와 광주 대구를 잇는 광주대교, 광주시의 연구소 구축, 광주시의 도시개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21건 4533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결정해 줄 것과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발

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흑산공항 연내 착공,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 열 건에 대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달빛내륙철도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길 원하고 흑산공항 조기 착공, 전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등 현안 사업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수년째 표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3월엔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이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을 진정으로 배려한다면 서둘러 주요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국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구역 분양권 비리 의혹도 밝혀내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된 철거 업체가 증거 인멸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철거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하던 중 다원이앤씨의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 13일 통째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CCTV도 의의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얽혀 있기에 이처럼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까. 다원이앤씨는 전국 철거 관련 시장을 장악한 후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회사 관련자가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다원 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이번 붕괴사고 철거공사에서는 석면 철거 공사를 다른 회사와 공동 수급 형태로 따낸 후 지역 철거 업체인 백승 측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및 분양신청권 특혜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도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입주·분양권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폭력조직 출신 문홍식 전 5·18 구속부상자대책위의 폭넓은 인맥이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시중에는 지역 공무원·경찰·정치인 등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다. 경찰이 과연 이러한 의혹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無等鼓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지방의회는 30년간 민의의 소통 창구 및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합량 미달의 일부 지방의원들의 물의가 이어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 '지방의회 30년'을 맞이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만다. 군사정권이 사실상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한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다. 1991년 3월과 6월 각각 기초단체 의원과 광역단체 의원이 선출되고 같은 해 7월8일 개원하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본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과 예산 등을 심

의·의결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민생과 생활 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인 된 지방의원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권 개입', 공무원에 대한 '갑질', 다음 선거를 겨냥한 '민원성 폭주 예산 편성',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지방의회 위상에 먹칠을 하곤 한다. 여기에 집행 기관 견제와 감시는 내뻗게지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일부 의원들. 이들 때문에 그동안 지역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해 통과돼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권한도 상당 부분 강화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만들어야 으면 한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전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